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결과 및 해설

2004. 6. 4

1. 개 요

○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04. 6.3~4 설악산에서 개최

- 쌍방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4개항의 합의서를 발표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조치 문제는 6.10경 개성에서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접촉을 개최하여 협의하기로 하였음.

* 전체회의 2회, 실무대표접촉 5회를 진행

〈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요약) 〉

1.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공동 노력
2.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04.6.15부터 다음 조치를 시행
 - ① 함정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 ② 상대측 함정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 ③ 함정간 상호대치 방지 및 오해가 없도록 국제상선공통망(156.8Mhz, 156.6Mhz)을 활용
 - ④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 제정·활용
 - ⑤ 불법조업선박의 동향 관련한 정보 교환
 - ⑥ 서해상 제기된 문제 관련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 통신선로 이용, 8.15까지 쌍방 통신연락소 설치
3.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 ① 6. 15 부터 모든 선전활동 중지
 - ② 8. 15까지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
 - ③ 선전수단제거 완료결과 상대측 통보·확인 및 필요시 상호검증
 - ④ 단계별 선전수단제거 완료시 그 결과를 각각 언론 공개
 - ⑤ 선전수단 재설치 및 선전활동 재개 금지
4. 구체적 실천을 위한 후속 군사회담 개최

2. 의 의

가. 금년 6월 15일부터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

-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한 이후, 그 동안 남북간 군사 분야의 협력이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진전과 균형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 한반도 긴장완화 등 남북 평화협력의 진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
 - 이제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남.

- 우선 한반도 긴장완화의 1단계 조치로서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긴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구체적 실천조치를 마련하는데 주력
 - 이러한 우리측 입장에 대해 북측도 인식을 함께 함으로써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6개조치에 합의
 - * ① 함정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 ② 상대측 함정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 ③ 함정간 상호대치 방지 및 오해가 없도록 국제상선공통망(156.8Mhz, 156.6Mhz)을 활용
 - ④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 제정·활용
 - ⑤ 불법조업선박의 동향 관련한 정보 교환
 - ⑥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을 보장할 수 있도록 8.15까지 쌍방 통신연락소 설치, 서해상 제기된 문제 관련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 통신선로 이용

-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에 대한 합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
 - 아울러 '99년, '02년 서해상의 무력충돌 사태를 남북해군간 긴장 완화를 위한 공동노력의 계기로 삼음.

나.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진기반 마련

- 지난 50여년간 남북이 방대한 군사력으로 침예하게 대치하던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중지하고 그 수단들을 제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 이제 군사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신뢰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6. 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에 상대방을 비방·중상하는 방송은 중단되었으나
 - 군사분계선 지역에서는 상대측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활동 및 수단들이 일부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
 - 이러한 요소들을 금년 6.15, 8.15를 계기로 중지 및 제거하기로 남북이 전격 합의함으로써
 - 남북 평화 및 화해협력 추진의 기본바탕인 상호 신뢰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특히 이번 합의는 남북이 앞으로 본격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추진할 수 있는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임.

다. 이번 합의는 남북간 경제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임.

- 그 동안 남북경제분야 협력에 비해 군사분야의 협력이 미진했으나
 -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군사분야와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이 서로 교호적으로 상승작용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

3. 주요 합의내용

1.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 남과 북은 남북관계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기본 임무로 한다는 데 합의를 이루었음.

2.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2004년 6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① 함정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 ②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 ③ 쌍방 함정들(함선)이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 상선공통망(156.8Mhz, 156.6Mhz)을 활용
- ④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을 제정·활용
- ⑤ 불법조업 제3국 어선 단속·통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 문제의 외교적 방법 해결 상호협력 및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
- ⑥ 서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
 - 8.15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기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 그를 현대화하는 데 상호 협력

- 우리측은 남북관계 발전을 안정적인 바탕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 군사분야와 경제, 사회문화분야 발전이 균형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첫 조치로서 우선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제시
- 북측도 서해상에서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 우리측의 기본입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우리측이 마련한 구체적 충돌방지 방안에 동의
- 이번 합의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측 구상을(실천이 용이하며 쌍방 모두에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인 군비통제로 추진)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음
 - 아울러 남북어민들이 쌍방 군부 협력의 결과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3.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

- ① 6월 15일부터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
- ② 8월 15일까지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
- ③ 선전수단제거 완료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 각기 감시·확인하며 필요시 상호검증
- ④ 선전수단제거 완료 결과를 각각 언론에 공개
- ⑤ 선전수단 재설치 및 선전활동 재개 금지

- 북측은 지난 1차회담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제거하는 문제가 절박한 문제라고 주장
- 우리측은 이러한 북측의 주장을 대승적으로 수용하여 구체적 중지 및 제거방안을 제시

- 특히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며 필요시 상호검증이 가능하도록 함.
- 남북이 군사적으로 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쌍방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거하게 됨으로써
 -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남북 평화와 화해협력의 큰 흐름이 확고해지는 계기를 마련

4. 이번 회담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후속회담 개최

- 남북은 개성에서 6.10경 후속 실무대표접촉을 개최하여
 -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와 관련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장성급군사회담이 남측과 북측을 오가면서 진행됨으로써 남북 군당국자들의 교류와 접촉면 확대의 계기를 이룩하고 이는 차후 북측 군인사들의 인식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끝>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3일과 4일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2004년 6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쌍방 함정(함선)이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상선공통망(156.8Mhz, 156.6Mhz)을 활용한다.

④ 쌍방은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⑤ 쌍방은 서해해상의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제3국 어선들을 단속·통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상호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

⑥ 서해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쌍방은 서해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기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하며, 그를 현대화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3.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② 쌍방은 2004년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 1단계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판문점지역이 포함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100호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 2단계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부터 제0640호 구간에서,

○ 3단계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0호부터 제1292호 구간에서 선전수단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각각 상대측의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도 할 수 있다.

④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각각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⑤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

4. 쌍방은 위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후속 군사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수석대표
준장 박정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단장
소장 안익산